美國産 쇠고기 고시 내용과 향후 전망

빠르면 다음달 초 살코기 시중 유통

LA갈비·내장 등 내달 하순 본격 수입

농민단체 "생존권 말살" 대정부 투쟁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장관고시 강행에 따라 사실상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식지 않은 가운데 국민적 반발이 계속되고 있은 상태여서 쇠고기 파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고시 무엇을 담았나**=우선 앞으로 미국산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였던 기존 수입조건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수입위생조건 본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있지 않지만, 부칙에 GATT 등 국제법을 원용해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달 25일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한 만큼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에 따라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는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RM)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된 소 머리뼈와 등뼈에서 생산된 회수육은 제외된다.

위생조건 22조에 따르면 미국 수의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에는 품명(축종 포함)·최종 가공작업장장·도축장·식육가공장·보관장·도축기간 또는 가공기간 등이 표시된다. 하지만, 연령표시 항목은 없다.

6조 '육류작업장 요건'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USDA)의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다만 부칙 3항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새 작업장 승인이나 이전에 승인 취소됐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5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광우병 발병만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한국 정부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검역주권 상실' 비판을 받은 부분이다. 때문에 정부는 고시 기간 중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서한)로 보장받았다. 정부는 이 내용을 부칙 6항에 명시했다.

24조에서는 같은 작업장에서 최소 2차례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한국 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작업장에서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는 계속 검역을 받을 수 있다.

◇**내주초 부터 시중 유통 가능**=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자취를 감췄던 미국산 갈비와 꼬리·내장 등이 다시 한국땅을 밟게 됐다.

우선 작년 10월초 검역 중단 이후 한국에 발이 묶여있는 5만3천여t의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가 내달 3일이면 검역을 마치게 돼 이르면 다음달초께부터 시중 유통이 가능하고, 이후 4년반 만에 다시 허용된 LA갈비 등이 내달 하순부터 본격 수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이 악화된 여론 때문에 판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초기에는 우선 소규모 식당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노동계 등 국민 반발**=고시가 강행되자 전국농민회,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 전국의 농민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 고시는 농민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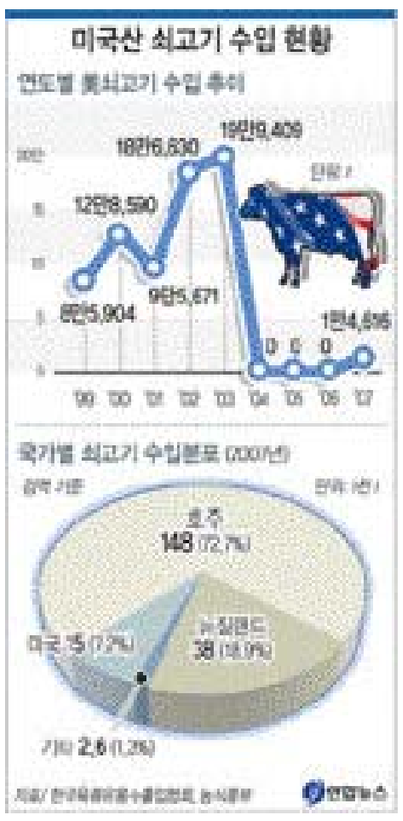
전국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노동계 등도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선택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쇠고기 수입 관련 일지

2003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발견
	12.27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2006	9.8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2007	5.22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2008	4.11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4.28	야 3당, 쇠고기 상임위 청문회 개최 합의
	5.2	'미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 집회
		정부 '광우병 괴담' 해명 관계부처 기자회견
	5.7	농림장관 '미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
	5.8	한승수 총리 대국민담화, 상황 발생시 협정개정 요구키로
	5.13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우리정부 방침 수용, 광우병 발생시 GATT 규정 따른 검역주권 보장
	5.20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발표
	5.22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문 관련 사과 담화문 발표
	5.29	정부, 미 쇠고기 고시 발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쇠고기 고시 발표 정국 급랭

18대 국회 개원 초부터 파행 불가피

與 "충분한 대책 보강"

野 "무효화 장외 투쟁"

정부와 여당이 29일 전격적으로 쇠고기 수입관련 장관 고시를 발표하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장외투쟁을 포함한 다각적인 고시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 개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함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등 18대 국회는 개원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 사실을 발표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한구 정책위의장,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모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 확정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쇠고기 고시'와 관련, "충분한 대책이 보강됐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축산 농가 피해 대책이나 국내 위생안전 문제 등이 보강됐다"고 밝혔으며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았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고시 강행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장외투쟁 을 포함한 고시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에 맞서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고시가 발표되면 권역별로 규탄대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31일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충청, 광주 등 4개 권역별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고시 효력 정지 등 법적인 대응 절차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장관 고시 강행 방침은 국민을 무시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도 '장관 고시'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주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외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송아지 165만원 밑돌면 현금 보전

■ 정부 축산업발전대책

앞으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농가의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고 당초 1조원 정도로 예정됐던 사료구매 자금 융자 규모도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역 비율도 기존 1%에서 3%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하며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도 1%에서 3%로 확대된다.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해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체가 불합격처리된다. 이어 미국 정부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도축장 물량은 5회 연속 강화검사가 실시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도 강화된다.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육류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물론 학교, 병원,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